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406
----------	-----

제안년월일 : 2001. 4. 20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주 문

- 침략전쟁으로 우리국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입힌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축소·왜곡하여 망령된 제국주의 역사관을 자국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하고 있고,
-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 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고 있어,
-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우리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150만 충청도민의 뜻을 모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종군 위안부의 내용을 전면 삭제하는 등 과거사를 축소·왜곡한 역사교과서 출간을 중단할 것과
-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본 아시아 제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인 역사교과서 왜곡행위의 시정을 촉구하고,
- 일본 우익단체의 근시안적이고도 소아병적인 자세는 일본의 미래세대와 아시아 각국과의 선린우호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 시키고자 함.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문

망령된 제국주의 사관과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우익세력들에 의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축소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 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으로 맺은 선린관계의 질서를 손상케 하고 있어,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관과 교과서가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올바른 미래진전이 없다는 것을 각인하여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제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함과 아울러 한·일간의 현안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충북도민 및 각 기관단체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구매를 자제하고, 교류중인 일본기관단체에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4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